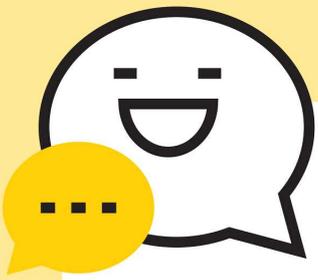


정의로운 대한민국

PART 1
분야별 공약





인사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정의당이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뀌어야 할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박근혜 정부도 거대양당도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 해소가 절실한 이때, 오히려 노동계약으로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변화에 대한 해답은 바로 이 책자에 있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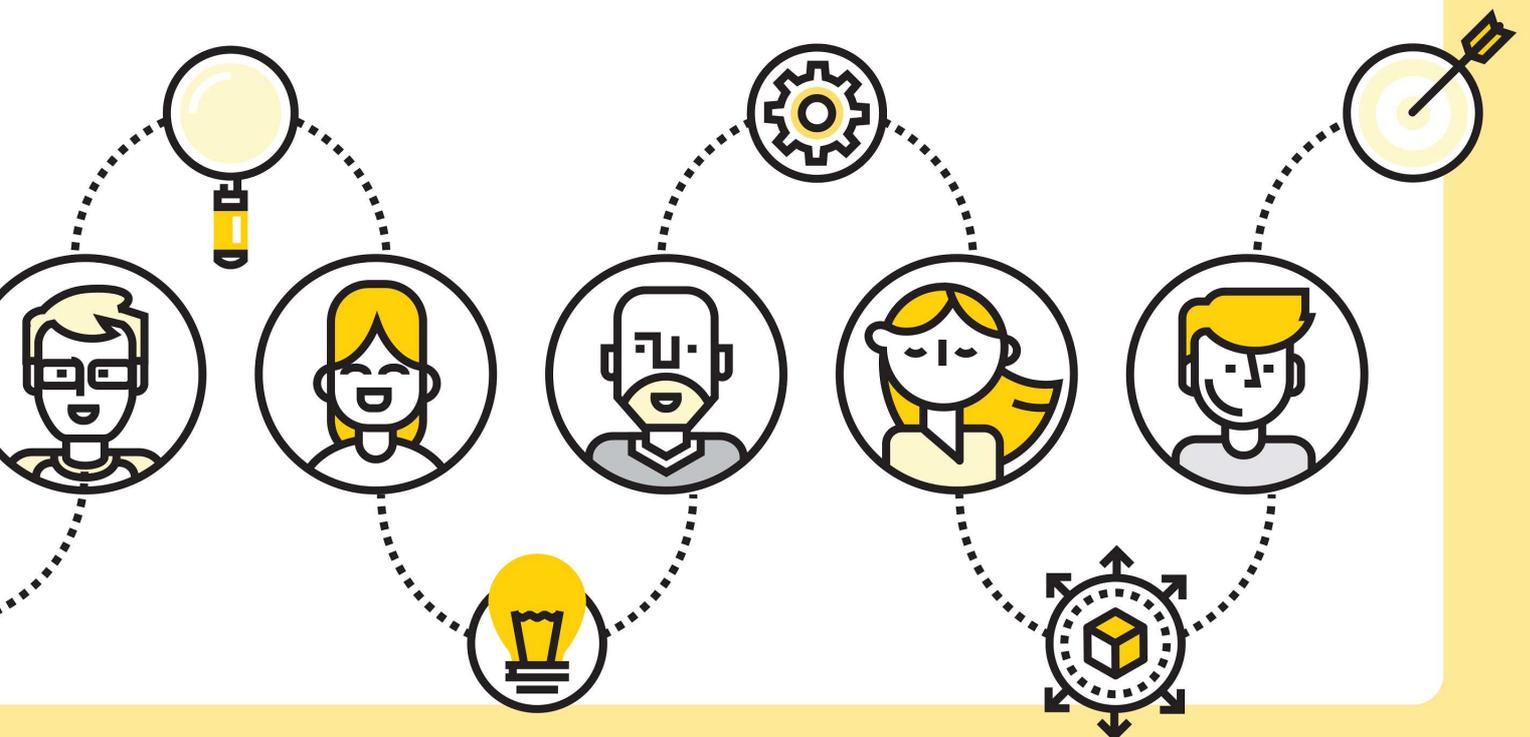
정의당이 추구하는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환경과 공동체가 공존할 수 있는 비전과 대안을 담았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구현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정치기득권, 재벌기득권, 금수저기득권, 불로소득기득권, 교육기득권 등 5대 기득권을 해체하는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알바생과 골목사장,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 농어민과 도시소비자가 서로 연대할 때만, 땅의 정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2016. 3. 31
정의당 상임대표 심 상 정





발간사

정의로운대한민국을 향한 정의당의 약속

20대 총선이 최악의 '깜깜이 선거'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어떤 후보가 나왔는지, 어느 당이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지도 모르고 총선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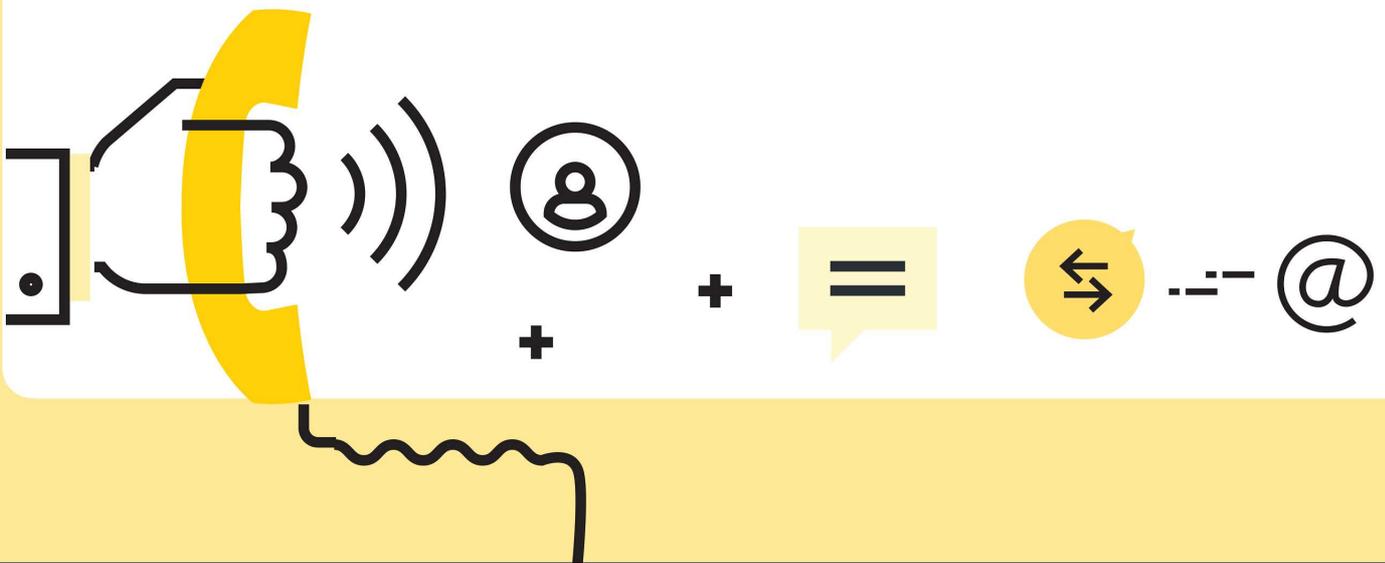
정책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기반한, 국민이 아니라 계파가 우선인 낡은 정당체제가 이런 진풍경을 낳았습니다. '조직'과 '바람'에 의존하는 거대정당들에게 정책을 기대하는 것은 사치일지 모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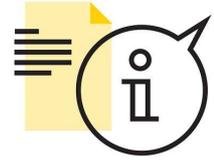
하지만 정의당은 다릅니다. 다른 당들이 공천을 가지고 막장드라마를 펼치는 동안 정의당은 그러거나 말거나 분야별 공약을 차근차근 발표했습니다. 다른 당들이 부실한 공약, 재탕삼탕 공약으로 공약집을 채울 때 정의당은 국민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공약을 고민했습니다.

정의당의 공약은 이 시대 낭떠러지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건네는 작지만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정의당의 청년공약은 노량진 학원가에서 컵밥으로 끼니를 때우는 청년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노동공약은 계약종료를 앞두고 마음 졸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내놓는 공약입니다.

정의당의 보육공약은 눈치 보며 칼퇴근해 어린이집으로 뛰어가는 워킹맘을 향한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교육공약은 학원비 걱정하는 학부모, 등록금 고지서 앞에 두고 한숨짓는 대학생과의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주거공약은 전세금 올려주지 못해 이삿짐을 싸는 세입자와의 약속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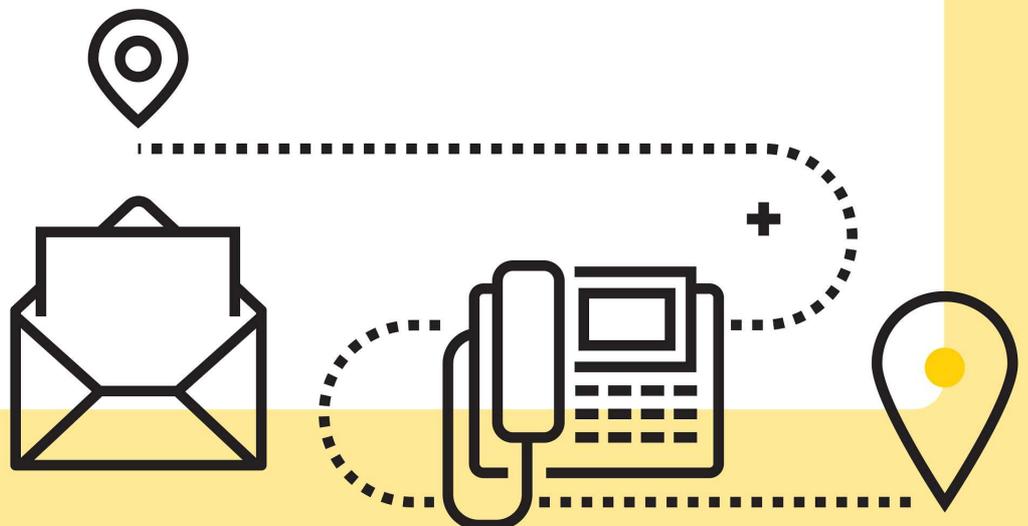


정의당의중소상공인자영업자 공약은 복합쇼핑몰 입점에 폐업을 준비하는 상인에게 건네는 다짐입니다. 정의당의 농업공약은 개방과 가격폭락에 속타는 농민에게 내놓는 맹세입니다. 정의당의 동물복지공약은 좁은 케이지 속에서 자라는 닭과 돼지, 위험에 노출돼있는 갈양이에게 내놓는 약속입니다.

정의당의 이번 총선 공약은 당 정책위원회와 국회정책연구위원, 당 부설 연구소 미래정치센터, 의원실 보좌진을 비롯한 당내의 정책단위가 6개월 넘는 작업을 통해 내놓은 결과물입니다. 지난 진보정당의 정책적 성과를 잇는 한편 익숙한 것과의 결별을 통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책적 진보를 담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동안 고군분투한 정책단위 구성원들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정의당은 이번 총선 공약을 선거용으로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20대 의정활동의 지침서로 사용할 것입니다. 비록 작은 정당이지만 공약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낭떠러지에 내몰린 분들께 부끄럽지 않은 정의당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31
정의당 정책위의장 김 용 신





정책기조

불평등 해소, 정의로운 대한민국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미래는 나아질 것이란 희망마저 사라지고 있습니다.

재벌주도 수출경제에서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건 '고용 없는 성장', '임금 없는 성장'입니다. 임금 인상률은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해고는 이미 일상입니다.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과 비교해 노동자와 자영업자의 노동소득분배율은 9.7% 하락했습니다. 지난 2012년 대선에서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가 화두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재벌개혁은 실종되고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생정책은 실종되고 복지공약은 파기되었습니다. 가계소득은 오르지 않고 가계부채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 해소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정의로운 경제', '정의로운 복지', '정의로운 전환'
그리고 '5대 기득권 해체' 등 4대 과제를 실천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을 정의롭게 만들겠습니다.

정의당은 최저시급 1만원, 평균월급 300만원 시대를 열고
2025년까지 소득격차를 서유럽 수준인 5배로 줄이겠습니다.

정의당은 불평등한 GDP 성장이 아니라 내 월급이 오르는 경제, 내 일자리가 좋아지는 경제를 추구합니다. 재벌개혁으로 골목경제를 살리고 조세개혁으로 소득격차를 줄여가겠습니다. 시장의 정의를 넘어 '인간적 가치들의 회복'과 '훼손된 존엄성'을 치유하겠습니다. 소수를 위해 다수가 불모로 잡힌 정의롭지 못한 경제를 정의롭게 바꾸겠습니다.

정의당은 또 하나의 월급, 복지임금을 통해
2025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복지국가를 달성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생애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평생복지, 교육·주거·의료 등을 책임지는 기초복지로 모두가 행복한 복지국가를 만들겠습니다. 현재 GDP의 10.4% 수준인 복지지출을 2025년까지 OECD 평균인 21.6% 수준으로 늘리겠습니다.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증세로 책임복지를 실현하고, 가계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민생개혁으로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겠습니다.

정의당은 미래를 여는 선도정당으로서 대한민국에 인권·생태·안전·평화의 가치를 더하겠습니다.

정의당은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자살률도 올라가는 성장의 역설에 맞서 시대전환을 선도하겠습니다. 경제적 평등에 더해 더 생태적이고, 더 평화롭고, 더 안전하고, 더 인권적인 사회가 될 때 더 많은 국민들이 행복해집니다. 모든 차별이 사라진 평등사회, 2040 한국 탈핵과 안전사회, 안보 민주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체제로 한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정의당은 불의한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국민의 노동조합, 시민의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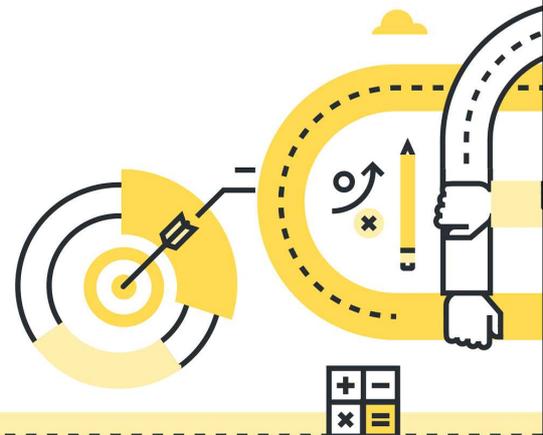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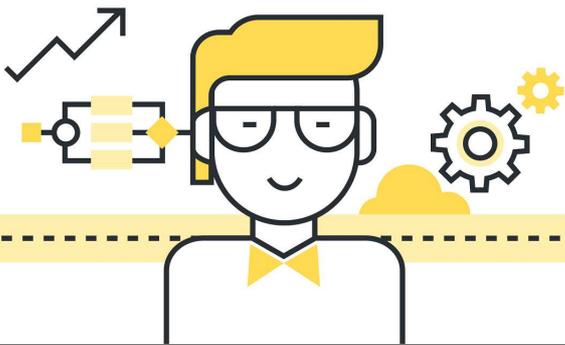
정의당은 기득권 해체를 통해 불평등이 불안을 낳고, 불안이 불공정을 낳고, 불공정이 불신을 낳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주체 형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의당은 노동자와 중소상공인,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힘을 키우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협력과 연대에 기반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목차

PART 1 분야별 공약

인사말	2
발간사	4
정책기조	6
분야별공약	
노동	13
농업	57
중소상공인	95
빈민	109
재벌개혁	115
금융·산업	133
균형발전	151
주거	169
탈핵에너지	205
국토환경	225
동물복지	245
과학기술	253
조세·재정	273
아동·청소년	295
청년	311



노인	339
여성	361
장애인	391
인권·소수자	413
보육	431
교육	451
보건의료	475
복지일반	491
안전	509
문화예술	529
언론미디어	553
ICT	571
정치·국회	579
정부행정	617
사법	631
지방자치	647
국방개혁	673
외교통일	685



24

안전 공약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4.16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안전사회로의 전환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의당은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난 재난대응체계를 혁신하겠습니다. 부족한 소방인력을 확충하고 일터에서의 안전을 보장하고 대형참사와 중대재해를 일으키는 기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여성이 달빛 아래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마을,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먹거리 불안 없는 건강한 밥상을 보장하겠습니다.

1. 안전사회 첫 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



1. 안전사회 첫 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 ①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보장
-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 ③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 전환 특별법 제정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 ① 국민안전처, '부'로 격상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
- ②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구축
- ③ 공직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 및 보건 직렬 신설 및 공채
- ④ 소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 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②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 강화 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③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 ④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 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 ① 다차원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마을 실현
- ②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 ③ 화학물질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 ① GMO 완전 표시제 도입
- ②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강화
- ③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1

안전사회 첫걸음, 세월호 진상규명

① 세월호 특별법 전면개정으로 철저한 진상규명 보장

진단

-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었으나 정부의 비협조, 법률상의 미비와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제 역할과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특별조사위의 구성, 조사활동 개시 시점, 종료 시점 등의 규정이 불분명하여 불필요한 해석논란이 빚어져 정부-특조위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음
- 특조위가 독립적인 조사기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의 정상적인 편성이 필수적이지만 특조위 예산은 조사대상인 해양수산부를 통해 요구하도록 하고 있어 조사활동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음
- 한편 특조위가 특별검사 임명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새누리당이 국회 논의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특검이 무산될 위기에 처해있음

약속

- 국회의 세월호 특검안 조속한 의결(19대 임기내)
- 특별조사위원회 조사활동기간 연장과 조사예산 보장 등 세월호특별법 개정
 - 특조위 활동 보장, 업무권한 확대 및 구체화, 활동개시 및 종료시점 명확화, 국가기관의 협조 의무 강화 및 예산에 대한 협의권 강화, 4.16재단 설립 지원, 조사방해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보장 등

② 세월호 온전한 인양과 선체 정밀조사 보장

진단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미수습자 9명이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으며 사고원인의 규명을 위해서도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이 필요함
- 세월호 인양작업을 맡은 중국 상하이샬비지가 지난해 8월부터 수중작업을 진행중이며 정부는 세월호를 7월말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음
- 상하이샬비지가 유실방지 사각펜스를 설치했지만 세월호가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물 속에 잠겨있어 선체의 부식, 파손 및 실종자 유실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음
- 한편 특별조사위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선체정밀조사가 필수적이나 정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범위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고 인양선체 정밀조사 예산(48억원)은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약속

- 특별조사위원회의 감독 하에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
- 특별조사위의 선체 정밀조사 보장
- 유가족과 협의해 인양 선체의 영구 보존 방안 마련

③ 세월호 교훈 담은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진단

- 세월호 참사는 안전후진국 대한민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임. 6800톤급 여객선이 무참히 침몰되는 동안 스스로 배 밖으로 나온 사람 외에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구조체계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줬음
- 세월호 참사뿐만 아니라 이미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 1위, 자살률 세계 1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1위라는 치욕적인 기록을 안고 있음. 우리 사회가 위험사회임을 입증하는

지표들임

- 국민소득 3만달러를 내다보는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와 같은 후진국형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렌들리’라는 미명 하에 성장과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가 무분별하게 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으로 미뤄온 결과에 다름 아님
- 이제 이윤을 중시하고 안전을 뒷전으로 해 왔던 우리 사회의 근본적 성찰이 필요함. 돈이 아니라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나라, 역시 생명 우선의 정부를 만들고 안전사회로의 대전환을 이뤄내야 함. 그것이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임

약속

- 주거, 교통, 교육, 노동, 레저와 문화향유에 이르기까지 국민생활 전반에 걸쳐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해나가기 위한 정부 차원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안전사회전환특별법 제정
- 국회 안전사회전환특별위원회 설치, 세월호특별조사위 후속조치 실행

2

안전 최우선 정부 실현

① 국민안전처, ‘부’로 격상 - 국가재난안전협업체계 구축

진단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는 국민 안전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능을 극적으로 보여준 결정적 사건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재난 문제를 총괄하는 국민안전처가 설립됐지만, 메르스 사태에서 국민안전처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써 본 조직에 대한 실효성과 안전 문제 대응체계에 대한 논쟁이 다시 제기됨. 다수의 전문가들이 주장하듯이, 안전문제는 무

엇보다 중앙과 지방, 그리고 정부와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중요함. 이것이 가능해야 안전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장 중심의 민첩한 대응과 중앙-지방과의 연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음

- 이런 맥락에서 국민안전처 업무의 본질은 국민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생산조직으로서 ‘계선 조직’의 성격을 가짐. 하지만, 실제 도입은 국무총리 직속의 처급 조직으로 참모조직의 위치로 도입됨으로써 실제 업무 성격과 조직의 법적 성격이 불일치하는 상황이 야기됨. 이러한 모순을 보완하고자 국민안전처장에게 장관급의 위상을 부여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 조직이 다른 ‘부’처를 통솔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으며 이는 메르스 사태 때도 드러난 바 있음
- 따라서 향후 국민안전처는 국민 안전문제를 총괄하기 위해 ‘부’급 조직으로 격상되어야 하며, 이러한 법적 권한을 바탕으로 각 부서 간, 중앙-지방 간, 정부-민간 사이의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해야 함
-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신설되는 국민안전부 관할 ‘지역사무소’ 설립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구체적으로 현재 광역소방본부 체계를 활용하여 광역소방본부를 국민안전부 권역별 지역사무소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중앙-지방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음

약속

- 국민안전처를 중심으로 국가재난안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안전문제에 대한 대응 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제2의 세월호 참사나 메르스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
 -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해 국민안전처를 국민안전부로 격상
 - 국민안전부 관할로 중앙-지역 간 상시 대응하는 ‘국민안전지역사무소’를 설립하고 광역소방본부 체계와 연계함
 - 중앙안전관리위원회와 시도안전관리위원회를 상설화시키고 이를 통해 각 부처, 정부간, 민간단체 실무책임자를 중심으로 협의회 형식의 상설 경계조직이 가동될 수 있도록 함

② 공공기관 '안전 중심 경영' 구축

진단

- 안전문제에 있어서 공공기관은 핵심 주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무엇보다 공공기관은 국가기반시설을 관리하고 안전문제에 관한 검사와 검증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민간업체 증가와 더불어 관리감독의 사각지대 문제도 커져가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내에 안전문제를 담당하는 조직이 법적으로 체계화돼있지 않으며 인력 역시 전문성이나 규모면에서 모두 다양한 상황
- 현재 국가기반 시설 관리기관인 공공기관의 안전 관련 조직은 안전본부, 안전품질실, 비상안전계획실 등 명칭이 기관별로 다르고, 소속 역시 사장직속, 본부장급으로 다양함. 또한 안전전담 부서가 없이 각 부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등 안전 관리 업무가 체계적으로 조직돼 있지 않은 곳도 있음. 공공기관 안전 관련 인원 역시 10명 이하부터 80명까지 다양하고, 조직 운영이나 전문성도 기관별로 다양함
- 더욱이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관련 점수는 따로 구분돼 있지 않음. 실제로 2013년 기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평가지표 체계는 리더십 책임경영 범주, 경영효율범주, 주요사업범주로 구성돼 있는데 안전관련 점수는 '주요사업' 범주 정도에 해당하며 체계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약속

- 안전관리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공기관 내 안전관리 조직과 인사체계 법제화, '안전관리위원회' 설치,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를 도입하여 공공기관의 안전문제 검사검증이 책임 있게 수행되도록 함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에 '실' 단위의 안전관리 담당기구 설치를 법제화
 - 공공기관 내 각 부서에 안전 담당 직원을 의무 배치하여 안전관리 부서와 상호 연계 기능을 수행토록 함

- 내부임원, 안전점검 전문가, 위탁용역업체, 관련 NGO가 함께 심의 의결하는 ‘안전관리 운영위원회’ 설치
- 공공기관 경영평가 항목에 안전경영평가 지표 도입

③ 공직 전문성 강화, ‘재난안전 및 보건 직렬’ 신설 및 공채

진단

-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를 통해 드러난 관료 전문성 부재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공직 체계의 특성과 관련 있음. 우리나라 관료체계는 기본적으로 일반행정이 중심의 계급제를 바탕으로 함. 즉 직무에 따른 전문성을 중심으로 채용하는 것이 아닌, 9급, 7급, 5급 공채를 통해 일반 능력을 평가하여 선발하고 평생 직업을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를 채택하고 있음. 따라서 관료의 능력은 채용 후 여러 부처를 순환하는 순환보직을 통해 일반 능력 중심으로 향상되는 체계. 이런 원리에 따라 보건복지부 국장에 산자부 출신이 임용되거나 해경 청장에 행정고시 출신이 임명될 수 있는 것
- 이러한 계급제적 폐쇄성 및 전문성 저하를 극복하는 제도적 방안으로는 직위분류제가 있음.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인정하지만 기본적으로 계급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음. 법적으로 직위분류제의 실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그 실시가 용이한 기관, 직무의 종류 및 직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음. 즉 우리 제도는 직위분류제적 요소가 가미된 계급제로서 핵심근간은 여전히 계급제에 바탕을 둬
- 실제로 현행 공무원 임용은 크게 일반행정직과 기술직으로 나뉨. 그 중 행정직은 순환보직을 기본으로 하고 있음. 이로 인해 관료 전문성 제고가 어려운 실정이며, 이는 세월호 사건의 일부 원인이기도 함. 한편 기술직 공무원들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고 인허가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나 재난발생 시 인명구조 등 즉각적인 현장대응이 어렵고 경험이 부족함
- 특히 재난 관리조직의 구성원 대부분이 일반 행정직(시설직 포함)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고 순환보직을 하고 있음. 따라서 안전 및 재난관리 전문성과 거리가 있으며 동시에 사고 발생 시 책임의식도 떨어짐

- 현재 우리나라가 직위분류제적 차원에서 도입한 제도는 크게 고위공무원단 제도, 전입, 전출 시의 시험제도, 개방형직위제의 채용, 공모직위제의 도입 등임. 즉 민간전문가는 동 제도를 통해 공직에 진입하고 있는데 현재 인사혁신처는 민간 전문가 채용을 5급 이하 하위직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제도는 대부분 과장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음
- 더욱이 문제는 이런 방식으로 직위분류를 통한 전문직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채용방식이 민간 전문가 중 계약을 통한 임기제로 채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감 있게 공직을 수행할 동기가 약하다는 것
- 따라서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안전 및 보건 분야 직렬을 도입하여 관련 전문가들이 그 분야에 천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직위분류제적 개혁이 필요함
- 이에 기존의 행정직, 기술직에 더해 안전직렬을 하위직뿐만 아니라 5급, 7급, 9급에 신설하여 공채를 통해 이들을 계약직이 아닌 국가공무원으로 정식 채용하고 순환보직 제한 및 맞춤형 성과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업무의 안전성 및 전문성을 제고시키는 방안이 필요

약속

- 직위분류제적 개혁을 재난안전과 보건 직렬에 우선 적용하여 안전문제에 관한 공직전문성을 제고함
 -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여 5급, 7급, 9급에 ‘재난안전 직렬’과 ‘보건의료직렬’ 신설하고 공개채용
 - 해당 직렬 공무원들의 순환보직 제한 및 승진·보수 성과관리 체계 정비

④ 소방재정 확충 및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

진단

- 화재나 재난 현지에 투입되는 소방관 현장출동인력이 기준보다 41%나 부족해 국민의 생

명과 안전은 물론 소방관들의 안전도 위협하고 있음

- 소방장비도 부족해 소방관들이 방화도 안 되는 낡은 장갑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고 안전 장비를 사비를 털어 구입하는 경우도 있음
- 소방관들은 사용연한이 지난 구조사다리를 사용하는 비율도 20%에 달하고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안전장비 예산이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토로
-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 2015년 발표한 「소방공무원 인권상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86.7%가 현재 인력이 부족하다고 답했고 지난 3개월 동안 78.9%의 소방공무원이 근무일 외 출근 경험이 있었다고 답했음
- 또한 응답자의 32.7%가 실제 일한 시간만큼 초과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으며 33.2%가 개인안전장비(장갑, 랜턴, 안전화 등)를 자비로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음
- 소방관들은 또 현장 위험을 악화시키는 장비적 요소들로 장비의 노후화(73.1%)와 장비의 성능 부족(40.2%)을 꼽았음

약속

- 향후 5년내 소방인력 확충(기준치 충족 목표)
- 소방공무원 처우개선(3교대근무를 100% 실현, 초과근무 수당 지급 의무화, 지자체별 수당 차이 해소)
- 소방대응장비확충 국가 재정 지원 확대
 - 국고보조 대상(119구조장비확충→소방통산전산 설비, 소방활동 장비, 소방청사 시설 개선 등)을 확대하고 기준보조율(현행 50%)을 70%로 상향 조정
 - 지방세인 지역자원시설세의 부동산경기 부양 목적의 감면 중단 및 소방분야 투자비율 확대, 소방 및 안전분야 외 일반재원 전용시 지방교부세 페널티 부과

3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① 안전업무 외주화 중단, 위험업무 정규직화

- 유해위험 업무 정규직 전환으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 유해위험 업무 도급 금지, 조선업 다단계 하도급 금지, 상시고용업무 정규직화

② 산재사망 및 재난사고 처벌강화특별법, 기업살인법 제정

- 산재사망·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
- 산재사망 처벌강화 특별법 제정으로 중대재해에 대한 사업주 책임자 처벌 강화, 산재사망에 대한 처벌 하한선 제도 도입, 하청·특수고용노동자 산재에 대한 원청 처벌, 산재사망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산재사망 사업장 영업정지 및 사업장 공표제도 도입
- 기업살인법 제정으로 다중이용시설의 시민안전 사고에 대한 사업주 처벌 강화, 공공안전 사고에 대한 정부 주요 책임자 처벌 강화

③ 산업안전보건법을 직업안전보건법으로 전면 개편

- 노동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 조성
- 중규모 이상 사업장의 제조업 등 일부 산업에 종사한 노동자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을 전 산업에 대한 안전보건 규제를 강화하고, 사업장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원청 및 발주처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정
- 안전보건규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현재 기술지원과 감독기능이 안전보건공단과 지방

노동청으로 분산된 것으로 직업안전보건청으로 통합하여 규제를 강화함. 직업안전보건청의 인력 및 예산을 두 배 이상 확충

- 전면 개정 또는 신설될 직업안전보건법은 노동자 및 시민 알권리가 보장되고, 노동자가 감시 활동 및 정책결정 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확대

④ 모든 산재가 보상받도록 산재보상보험법 전면개정

- 재해노동자가 최상의 치료, 재활을 통한 조기 직장 및 사회 복귀 실현
- 건강보험과 같이 병의원에 산재환자에 대한 산재보험 청구권 대행 권한 부여
- 산재환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청구 시 근로복지공단에 입증책임 부과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평가 기능 독립

⑤ 산재보험 적용대상 확대와 사회보험 기능 강화

-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
- 특수고용·해외파견 노동자 및 출퇴근 재해 산재보험 적용 확대
- 농민, 1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단계적인 산재보험 적용 확대
- 감정노동, 공황장애, 심야노동으로 인한 수면 장애 등 직업병 인정기준 확대
- 중소기업 인허가 과정에서 산재보험 가입 강제 규정 도입
- 개인실적요율제 폐지 등 영세사업장에 불리한 차등보험료율제도 개선

4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① 다차원적 범죄예방 시스템 구축으로 안전한 마을 실현

진단

-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도입하고 있으나 법률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은 미비한 상태임
- 더구나 물리적 환경 개선만으로는 범죄예방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역사회의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등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
- 또한 범죄예방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뿐 아니라 중앙정부, 공공기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 모두가 함께 해야 시너지가 높아짐

약속

-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기본법 제정
 - 중앙정부의 의무, 범죄예방환경설계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업무범위 명시, 예산지원 근거 마련 등
- 우범지역 진단 및 물리적 환경개선, 지역 주민 참여를 통한 범죄예방,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범죄예방 전략 수립

②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안전기준 강화

진단

- 지난 2015년 134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규제완화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범죄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만으로는 불가능하며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함
- 도시형 생활주택은 1~2인 가구의 증가와 전세가격 상승에 대처하기 위해 2009년 이명박 정부가 도입한 주택유형으로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기준 및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함
- 이에 따라 소방시설, 외벽 마감재, 피난계단, 방화문 등의 기준이 취약해 화재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또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는 차량의 진입도로 및 인접도로 불법주차를 야기해 소방차와 구급차의 단지 내 진입을 막아 대형재난을 야기할 수 있음
- 정부가 뒤늦게 진입도로 기준, 가연성 외벽 마감재 사용금지 등 허가기준을 강화했으나 약 35만 가구에 달하는 기존 주택에 대한 안전 대책은 없는 상태임

약속

- 원룸형 주택·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안전 기준, 주차장 설치 기준을 아파트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기존 건설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③ 화학물질정보 투명하게 공개하는 지역사회 알권리법 제정

진단

- 2012년 9월 구미불산누출사고로 5명 사망 18명 부상, 12,243명이 진료, 부식된 차량만 2000대 넘게 발생. 2013년에는 삼성전자 화성공장 불산 누출, 충남 금산군 불산 누출, 2014년 여수 GS칼텍스 송유관 파손 등 유해화학물질 사고가 잇따라 발생
- 하지만 해당 기업 노동자는 물론 지역주민들이 공장에서 사용되는 유해물질에 대해 전혀

5

먹거리 걱정 없는 안전한 밥상

① GMO 완전 표시제 도입

진단

- 지난해 CJ제일제당·삼양농심 등 한국의 대표적 식품업체들이 터키로 수출을 시도하다가 GMO 성분 검출로 통관을 거부 당한 바 있음
- 식품위생법은 그동안 GMO 성분 표시와 관련 함량 5순위 원재료가 아닌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되고 제조가공 후 GMO DNA나 단백질이 남아있지 않는다면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해왔음
- 지난해 12월31일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함량 5순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은 삭제됐으나 가공식품의 경우 GMO의 유전물질(DNA)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성분 표시를 요구하는 예외조항은 건드리지 않았음
- GMO 대두 등을 이용해 만든 식용유가 사용된 가공식품은 여전히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 유럽에서는 GMO 성분 잔류와 상관없이 GMO를 원재료로 사용한 경우 예외 없이 표기하도록 되어 있음

약속

- GMO 완전표시제 실시
 - GMO를 사용했으면 함량순위, GMO DNA나 단백질 잔존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표시

② 방사능 오염 먹거리 규제 강화

진단

-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 이후 일본산 수입수산물에서 세슘이 검출되어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었음
- 위경맘연구소의 학부모 1천명 대상 여론조사에 따르면 학교급식에 꺼려지는 식재료(1, 2순위 합계)는 방사선조사식품(71%), GMO(64%), 화학첨가물(38%), 감미료(17%), MSG 등 조미료(11%) 순인 것으로 나타남. 설문문항이 모호했음을 감안해도 방사능 오염 먹거리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음
- 시·도 교육청, 기초자치단체별로 방사능 관련 급식조례가 일부 제정되긴 했으나 식품위생법, 학교급식법에 방사능 먹거리 안전 관련 조항이 없어 조례의 실효성이 없거나 부족하고 지역에 따라 기준도 상이함

약속

-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식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시설 확보 근거 마련
-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급식 식재료 방사능안전검사 강화 및 실효성 확보

③ 식품첨가물 완전 표시제 강화

진단

- 소시지, 햄, 베이컨에 많이 들어가는 아질산나트륨, 합성보존료로 많이 쓰이는 안식향산나트륨, 건조과일의 갈변방지과 포도주의 산화방지 등에 사용되는 아황산염을 비롯해 발색제, 착향료, 감미료, 팽창제, 유화제, 합성보존료, 소포제, 산화방지제, 살균제 등의 용도로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각종 식품첨가물은 441개에 달함
- 식품첨가물 가운데 아질산나트륨은 우울증, 뇌손상, 암을 발생시킨다는 연구결과가 있으며

안식향산나트륨은 피부염증, 간손상, 암 발생, 이황산염은 천식, 기관지염의 우려가 제기되어왔음

- 식품업계는 정부의 규제완화 흐름에 편승에 식품첨가물 규제를 현행보다 더 완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식품완전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여러 첨가물을 넣어도 사용 목적이 같다면 용도명 하나만 넣어주면 되는 일괄표시가 허용되며, 최종제품에 남아있지 않은 경우 또는 포장크기가 작은 경우, 대형마트 등에서 만들어 파는 즉석식품인 경우에는 표시가 면제되는 등의 예외가 있음

약속

-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에 대해 예외 없이 표시 의무화

② 시장실패 책임지는 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배구조 개혁으로 공공성 회복

진단

- 공공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만 해결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를 다루는 기관으로, 무엇보다 공공성 및 책임성의 확보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2014년 기준 304개의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음

[주요 9개 공기업의 금융부채 증감 원인]

(단위: 조원, %)

구 분	2007	2011	증감액	금융부채 증감원인				
				정부정 책사업	공공 요금	자체 사업	해외 사업	기타(회 계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	40.9	89.8	48.9	29.3	0.0	19.6	0.0	0.0
한국전력공사	14.6	31.1	16.5	0.0	8.0	5.9	1.4	1.2
한국가스공사	7.2	23.1	15.9	0.0	5.7	5.0	2.0	3.2
한국도로공사	16.4	23.2	6.8	3.6	1.3	1.9	0.0	0.0
한국석유공사	3.0	11.9	8.9	0.0	0.0	-1.9	8.8	2.0
한국철도공사	5.0	11.0	6.0	1.3	1.6	1.0	0.0	2.1
한국수자원공사	1.0	11.3	10.3	8.5	0.5	1.3	0.0	0.0
한국광물자원공사	0.4	2.0	1.6	0.0	0.0	0.5	0.6	0.5
대한석탄공사	1.1	1.4	0.3	0.2	0.0	0.1	0.0	0.0
합계	89.6	204.8	115.2	42.9	17.0	33.4	12.8	9.0
(비중)			(100.0)	(37.2)	(14.8)	(29.0)	(11.1)	(7.9)

자료: 감사원, 「공기업 재무 및 사업구조 관리 실태」, 2013.5.

-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은 방만 경영 및 과도한 부채, 그리고 낙하산 인사로 대변되는 관피아 문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한 바 있음. 특히 토지, 전력, 철도, 수자원, 항만 등 우리나라 핵심 자원을 다루는 공공기관 등이 2012년 기준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원리금상환이 불가능한 기관으로 파악됐음
- 무엇보다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는 정부의 무리한 사업추진에 따른 결과이기도 함. 가령 한국수자원공사의 부채는 2009년 3.0조원에서 2012년 13.8조원으로, 부채비율은 29.1%에